



구한말(1881~1910) 지방신문에 관한 연구

박 용 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해졌다. 지방언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나 열악한 현실 속에 지방언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동안 지방언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 연구도 매우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언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언론의 현재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현재 지방언론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언론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지방언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하여, 지방언론의 사사(社史)를 제외한다면 정진석(1992), 박정규(1997) 등의 논문과 김진화(1978), 김대상(1981), 광주언론인동우회(1991), 이광석(1997), 이문교(1997) 등의 저서를 들 수 있는 정도이다. 전자의 논문들이 주로 전국의 지방언론을 통사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본 것들이라면, 후자의 저서들은 특정 지방의 언론을 통사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것들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지나치게 연구대상이 넓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후자의 경우 대부분이 학술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언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기나 지역을 한정해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방 이전의 지방신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해방 이전의 지방신문들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 독자들이 적지 않았고 해방 이후의 지방신문들이 일제하의 지방신문을 이용하여 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해방 이전의 지방신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 또한해방 이전 지방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시기의 지방신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전의 지방언론사에 관련된 연구로는 한국인에 의해 발행된 구한말 유일의 지방신문인 경남일보(慶南日報)를 다룬 한상란(1976), 최기영(1991)의 연구나 한국 최초의 신문으로 부산에서 발행되었던 조선신보(朝鮮新報)를 다룬 Altman(198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오주환(1970), 최준(1976a, 1976b), 이해창(1983), 정진석(1983a, 1983b), 임근수(1984), 채백(1990) 등의 연구도 구한말의 일본인 경영신문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지방신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특정 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지방신문을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결국 해방 이전의 지방신문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해방 이전의 신문이 어떻게 해방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한계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전의 시기를 모두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침략이 시작된 개항 직후부터 시작하여 일제에 의해 강점된 1910년까지의 지방언론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이 시기의 개별 지방신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일제하나 해방 이후의 지방신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가능해 질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개항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침략을 강화해 나가면서,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1) 해방 이후 각 지방에는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신문사 시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이러한 적산 인쇄시설을 좌익계가 장악했다가, 미군정의 개입으로 점차로 우익에게 관리가 위임되거나 불하되게 되었다(정진석, 1992, pp. 209-211; 김민환, 1996, pp. 341-345; 박정규, 1997, pp.77-81).

한국의 각 지방에 이주해 오게 되었다. 이렇게 각 지방에 와서 살게 된 일본인들이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서 한국 지방신문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런 지방신문들은 일본인 거류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점차로 일제의 지배정책을 정당화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신문들은 점차로 국문판 발행 등을 통해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방에서 어떤 신문들이 발행되었고, 이런 신문들은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개항 이후부터 일제에 의해 강점될 때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전국 각 지방에서 발행된 지방신문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지방신문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²⁾ 또한 구한말의 지방신문들 중 거의 대부분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접근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방신문의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³⁾ 특히 구한말에 각 지방에서 언제 무슨신문이 발행되었는지 조차도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각 지방마다 어떤 신문들이 발행되어 활동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특성이나 활동의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서 발행되었던 일간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일간지 등장 이전의 경우에는 전사(前史)로서 일간지가 아닌 경우라고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구한말 지방신문의 역사를 다루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시 한국에서 최초로 신문이 발행되었던 1881년부터 1894년의 청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청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1904년의 노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그리고 노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강점되던 1910년 까지의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⁴⁾ 이러한 시기 구분은 일본의 침략정책의 성격 변화와 이에 따른 일본인들의 언론활동의

2) 당시의 행정 구역은 전국이 13도로서 당시에 서울(당시는 京城)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지역, 즉 인천 같은 경우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구한말의 경우 강원도, 충청북도, 황해도에 신문이 없었고, 일제하에서는 황해도에서 신문이 창간되어 결국 해방될 때까지 강원도와 충청북도만 신문이 없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3) 현재 구한말의 지방신문 중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는 1881년 부산에서 창간되었던 조선신보와 1909년 진주에서 창간되었던 경남일보를 들 수 있다. 조선신보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5호부터 12호까지가 고서동우회에 의해 영인본으로 출판되어 있고, 경남일보는 영남대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결호가 상당히 많다.

내용 변화에 근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시기구분을 통해 지방신문 발행주체와 발행목적, 일본정부의 지방신문에 대한 정책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결국 어떻게 일본인 발행 지방신문이 한국의 지방신문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무성, 주한일본공사관, 통감부, 총독부 등의 일제측 자료, 일제하에서 발행되었던 부사(府史)들과 연감, 일본인들이 간행했던 각종 언론 관련 서적이나 논문 등의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⁵⁾ 결국 본 논문은 이런 자료들을 이용하여, 구한말 지방신문들의 발행상황을 고찰해보고,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신문들의 특성과 활동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개항 직후 일본인의 신문발행

1) 개항 직후 조선신보의 창간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이후 부산을 시작으로 하여 차례로 개항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개항지에는 일본인 상인 등이 대거 이주해 왔다. 가장 먼저 개항된 부산의 일본인 상인들은 개항 직후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상회의소(居留地商會議所)를 조직했고, 1879년 8월에는 이를 재부산항일본인상법회의소(在釜山港日本人商法會議所)로 개편하였다.⁶⁾ 이러한 부산의 일본인상법회의소는 1881년

4) 구한말 언론사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오주환, 1970, pp. 376-377; 최준, 1976a, p.263; 정진석, 1983b, p.103; 김민환, 1988, pp.319-333; 채백, 1990, pp.18-20)

5) 일제하에 각 도마다 행정단위로서 1-2개 정도씩 있었던 부(府) 지역에서 주로 지방신문이 발행되었는데, 이런 각 지역의 부청(府廳)에서 발행한 부사(府史)는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역 언론의 역사를 살펴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통감부 시절에 발행된 통계연보도 구한말에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신문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제의 강점 이후 나온 연감이나 언론 관련 서적 및 논문들은 구한말 신문의 창간연도나 신문제호를 틀리게 기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할 경우에 매우 큰 주의를 요한다. 특히 몇 번의 제호 변경이 있었던 상황에서 임의로 과거의 특정 신문을 기준으로 하여 창간연도를 기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참 뒤에 나온 신문을 구한말에 창간된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료마다 창간연도나 신문제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노력하였다.

12월 10일에 한국에서는 최초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신보를 발행하였다.⁷⁾ 일본인 상인들은 당시 개항장 내에서 벌어졌던 일본인들의 행패로 인해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자(부산상공회의소, 1982, pp. 51-53),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완화시키고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신보를 창간했던 것이다.

조선신보는 책자 형태로서 주간(旬間)으로 발행되었으며, 일문(日文)과 한문(漢文)을 사용하였고 극히 일부 기사의 경우에 한해 국문(國文)을 사용하였다. 이렇듯 일본 이외에 한문도 사용했던 것은, 이 신문이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부 한국인들까지도 독자로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조선신보의 지면은 영사관의 공시사항을 다룬 '영사관록사'(領事館錄事),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조선신보', 그리고 '잡보'(雜報), '부산상황'(釜山商況), '원산통신'(元山通信), '기서'(寄書), '물가표'(物價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신보는 상인단체에서 발행했던 만큼 경제기사가 많았지만, 한문을 사용한 '조선신보'나 '기서'의 내용에는 단순히 경제지였다고만 보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다. 특히 '조선신보' 중에서 5호와 6호에 연속해 게재된 '고조선국지방장관각위'(告朝鮮國地方長官各位)나, 11호의 '민권론'(民權論) 등을 보면, 이 신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계몽적 역할을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서'의 내용에서도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 외에 조선의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도 게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몽적 논조는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한국침략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⁸⁾

조선신보가 창간된 다음 해인 1882년에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면서 개항장

6)일본인상법회의소는 1880년 9월에 다시 조직을 개편하며, 일상적인 업무로서 내외 상황(商況)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 수출입물품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 물품진열소를 관리하는 일 등을 규정했다(《釜山府史原稿》 6, pp. 149-150).

7)조선신보의 창간호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책에 실려 있는 1882년 3월 3일자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1881년 12월 10일에 창간된 것으로 보고 있다(原八郎, 1936, p. 262). 이 기사에는 조선신문사라는 독립된신문사에서 조선신보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한다(櫻井義之, 1940, p.29). 그러나 조선신보의 지면에는 재부산황일본인상법 회의소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에서의 일본인들의 활동도 다소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지(《釜山府史原稿》6, p. 171), 조선신보를 뒤이은 일본인 경영신문들의 등장은 한 동안 없었다. 그러나 이미 1881년에 원산이, 1883년에는 인천이 개항된 가운데, 이런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상업활동도 활발해지면서 다시 일본인 경영신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1984년의 갑신정변(甲申政變) 등을 겪었기 때문인지,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들은 189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

2) 1890년대 초반의 지방신문

개항장의 인구 증가추세를 정리한 <표 1>에 나타나는 것처럼, 일본인 인구가 가장 급격히 늘어났던 인천에서 조선신보의 뒤를 이은 두 번째의 일본인 경영신문인 인천경성격주상보(仁川京城隔週商報)가 1890년에 등장하였다.⁹⁾ 인천경성격주상보는 제물상보사(濟物商報社)라는 독립된 기업에서 상업신문을 표방하며 창간한 것으로

〈표 1〉 개항장의 인구 변동

자료 : 임승표(1998, pp.11-12.)

지역	부 산	원 산	인 천	서 울
1880년	2,066	207	0	0
1885년	1,896	235	562	89
1890년	2,733	708	1,554	522
1895년	4,953	1,362	4,418	1,519

(《仁川府史》, p.1389), 당시 인천에서 9명이 공동으로 설립한 '인천환소'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발행될 수 있었다(《仁川府史》, p.1380).

- 8) Altman은 한국인이 읽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인지, 일문기사에는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경멸하는 기사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1984, p.694). 그러나 조선신보는 일부나마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 한문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 9) 인천경성격주상보의 창간연도는 자료에 따라 다르다. 창간 연도가 1888년으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信夫淳平, 1901, p.132; 岩永九二一, 1931, p.25), 1890년으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으며(《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77; 《仁川府史》, pp.1379-1380; 櫻井義之, 1940, p.30), 대략 1889-1890년경이라고만 기록한 자료도 있다(原八郎, 1936, pp.263-264). 그 중 《仁川府史》는 일찍부터 인천에서 활동했던 아오야마 요시에(靑山互惠)의 회고에 근거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오야마가 당시 인천 언론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이고(菊池謙讓, 1931, pp.186-187), 그의 회고가 인천경성격주상보가 나온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일단 1890년설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신문은 1891년 8월에 44호를 마지막으로 휴간하고 말았으며(《仁川府史》, p.1389), 그 직후 이 신문을 개제(改題)하여 1891년 9월에 조선순보(朝鮮旬報)가 창간되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1892년 4월에 22호를 끝으로 다시 조선신보(朝鮮新報)로 개제되어 발행되다가 청일전쟁이 개전되면서 이 신문마저도 휴간되고 말았다(《仁川府史》, p.1390.; 信夫淳平, 1901, p.132). 특히 조선신보의 휴간은 청일전쟁이 발발할 즈음에 발행된 호의가 발매금지되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한국언론연표》I, p.6), 이는 결국 전쟁수행 등의 침략적 정책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도 강력한 탄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인 수가 가장 많았던 부산에서는 1892년에 다시 부산상황(釜山商況)이라는 신문이 발간되어 상업과 경제에 관한 보도를 위주로 하여 발행되다가, 그후 동아무역신문(東亞貿易新聞)으로 개제되어 한 동안 발행되었는데 결국 이 신문마저도 곧 휴간되고 말았다(《釜山要覽》, p.335).

이렇듯 1881년 부산에서 발행되었던 조선신보에 이어서 1890년대 초반에 인천과 부산에서 일본인에 의해 다시 신문이 발행되었지만 오랫동안 발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인의 신문발행은 그리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 시기까지 일본인이 발행했던 신문들은 주로 경제적 목적을 앞세운 것으로서, 본격적인 침략의 수단이었다기보다는 일본인 상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권을 확장하기 위해 발행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청일전쟁 이후의 지방신문

1) 청일전쟁 발발과 조선시보의 창간

1894년 7월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 가장 먼저 등장한 신문이 1894년 11월에 부산에서 창간된 조선시보(朝鮮時報)인데, 이 신문은 일시 휴간 중이었던 동아무역신문을 이어서 발행된 것이었다.¹⁰⁾ 조선시보는 부산영사 무로타 기후미(室田義文)의 제의를 아다치 겐조(安達謙藏)가 받아들여 창간을 준비하고, 부산상업회의소의 자금 4백원을 지원받아 결국 1894년 11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安達謙藏, 1960, pp.45-46).

부산 영사 무로타는 이미 평양에서 일본이 대승을 한 직후인 1894년 9월에 서울의 공사에게 승전의 소식을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일본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던 인물이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2, pp.82-87).¹¹⁾ 비록 직접 신문발행을 건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건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무로타가 지방의 영사로서 누구보다도 신문발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시보는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현(熊本縣) 사람들에게 의해 발행되어 이들이 아니면 주필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고, 한 때 구마모토현의 규슈니치니치신문(九州日日新聞)의 지부 업무도 했다고 한다.¹²⁾ 이것은 구마모토현 출신으로서 언론계 경험이 전혀 없던 아다치가 자신의 고향에서 발행되던 신문에 재직하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신문을 창간했기 때문이었다(安達謙藏, 1960, p.46). 특히 아다치가 열렬한 대륙침략론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마모토국권당(熊本國權黨)계열의 낭인이었다는 점에서(강창일, 1992, p.52), 그가 주도하여 구성한 편집진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영사 무로타가 지원하고 대륙침략론자로서 낭인계 인물인 아다치가 주도하여 조선시보가 창간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일본인 발행의 신문이 어느 정도 정치적 침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결국 부산과 인천 등 개항장에서 시작된 일본인의 신문발행이 점차로 경제적 목적 위주에서 벗어나 점차로 정치적 침략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

10)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조선시보의 창간 시기를 1892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보가 부산상항과 동아무역신문을 이어서 발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조선시보의 창간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보를 창간했던 아다치 겐조(安達謙藏)의 회고나(安達謙藏, 1960, pp.45-46), 오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朝日新聞) 1894년 11월 13일자 기사나(《언론연표》I, p.7), 기타 자료를 보아도(《釜山要覽》, p.335) 1894년 11월에 창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11) 무로타의 이 건의는 1894년 9월에 작성되어, 다음 달인 10월에 상신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시기별로 정리해 펴낸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은 이후의 인용에서 권수와 면수만을 표기할 것이다.

12) 이러한 주장은 대구에서 190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행되었던 《朝鮮》이라는 주간지에 6회에 걸쳐 연재된 내용을 정리한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櫻井義之, 1941, p.11).

다. 조선시보는 아다치가 한성신보를 발행하기 위해 창간된 지 얼마 안된 시기에 서울로 올라간 이후에도, 그와 같은 구마모토헌 출신들에 계속해서 운영되게 되었다(安達謙藏, 1960, p.46). 특히 전국적으로 신문이 하나도 발행되지 않던 1894년에 창간된 조선시보는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일제의 통폐합 조치로 사라지게 된 1941년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되었다.

한편 청일전쟁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1894년 12월에는 인천에서 신조선보(新朝鮮報)가 창간되기도 하였다. 조선신보의 휴간으로 신문이 발행되지 않던 인천 지역에서 거류 일본인들의 요구로 창간되어 격일간으로 발행되던 이 신문은 다음해인 1895년 9월에 휴간되고 말았다(《□川府史》pp.1390-1391). 이 신문은 조선시보와는 달리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발행되어 과장보도 등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2) 청일 전쟁 이후 지방신문의 발행

청일전쟁이 끝난 이후 인천에서는 청일전쟁의 개전과 함께 휴간되었던 조선신보가 1895년 10월 25일에 아오야마에 의해 복간되어¹³⁾ 격일간으로 발행되다가 그가 죽자 1897년 3월부터는 나카무라 다다요시(中村忠吉)에 의해 인수되어 발행되면서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川府史》, p.1391). 특히 조선신보는 1897년 4월부터 일본의 무성으로부터 월 50원씩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한일의교사료총서》2, pp.3-9),¹⁴⁾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었다.¹⁵⁾

1899년 3월에 조선신보는 한국인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해 국문 기사를 게재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을 만큼 적극적인 경영을 하기 시작하였다(《한일의교사료총서》2, pp.66-69). 또한 조선신보는 1901년에는 신문지폭을 확장하고 다시 국문 및 영문난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한일의교사료총서》2, pp.190-193). 또한 조

13) 아오야마는 이미 조선신보가 1894년에 휴간되기 이전에도 조선신보의 사장 겸 주필로 활동했다고 한다(菊池謙藏, 1931, pp.186-187).

14) 김용구 교수가 미간행된 일본의 무성기록을 정리해서 간행한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는 이후의 인용에서 《한일의교사료총서》로 약칭하고, 권수와 면수만을 표기할 것이다.

15) 1898년에 조선신보는 연간 보조금 600원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306원의 흑자를 보게 되었다(《한일의교사료총서》2, pp.63-65).

선신보는 1902년에는 격일간을 일간으로 바꾸고, 서울에 통신부를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仁川府史》, p.1391).

한편 부산에서는 1894년 10월에 창간된 조선시보가 계속 발행되었을 뿐 다른 신문들의 발행은 부진했지만,¹⁶⁾ 다른 개항장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인 경영신문들이 등장하였다. 개항에 비해 신문의 발전이 늦었던 원산에서는 1897년 7월에 원산시사(元山時事)라는 등사판 주간신문이 창간되었다가 곧 폐간되었고(高尾新友衛門, 1916, p.247; 1922, p.185), 1903년 1월에 다시 같은 제호의 원산시사라는 일간신문이 창간되다.¹⁷⁾ 이 신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동년 3월부터 월 25원의 보조금을 일본의무성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한일외교사료총서》 3, pp.2-10). 또한 1897년에 개항된 목포에서는 1899년 6월에 목포신보(木浦新報)가 월 6회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¹⁸⁾ 목포신보의 창간을 주도했던 목포 거류민회 이사이며 상업회의소 이사이기도 했던 다니가키가이치(谷垣嘉市)는 인천에서 발행되던 조선신보의 기사를 한적에 있었던 인물로, 신문발행을 추진하면서 인천활판소의 야마모토 이와키치(山本岩吉)를 초빙해 목포활판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신문을 발행하도록 하였다(《木浦誌》, pp.233-235; 《木浦府史》, pp.533-534). 그러나 당시에 일본 거류민이 불과 7-8백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신문의 재정상태는 매우 어려웠고, 결국 1901년 10월에는 야마모토가 떠나고 다니가키가 직접 신문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木浦誌》, pp.235-238; 《木浦府史》, pp.533-535). 1901년 당시에도 신문발행부수가 불과 120-130매 정도였고, 광고도 70%가 무료였기 때문에, 영사관 보조금 10원, 거류민단의 공문게재료 5원,

16) 부산에서는 1902년에 부산조보(釜山朝報), 1903년에 조선공론(朝鮮公論)과 부산실업신문(釜山實業新聞)이 창간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근거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김대상, 1981, p.25). 다음의 자료에는 1904년에 조선평론(朝鮮評論)이라는 잡지가 발행되다가, 조선의실업(朝鮮の實業)으로 개제되어 발행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을 뿐이다(櫻井義之, 1941, p.13).

17) 1903년 7월에 창간되었다는 기록도 있지만(高尾新友衛門, 1922, p.185), 1903년 3월 17일에 원산영사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조금을 요구하며 올린 보고서에는 분명히 1903년 1월에 창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한일외교사료총서》 3, pp.2-3).

18) 1899년 6월에 창간된 것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고(《第3次統監府統計年報》, p. 76; 《新聞總覽》1926年版, p.505), 1898년 8월에 창간된 것으로 기록된 자료도 있다(《新聞總覽》1920年版, p.890; 原八郎, 1936, p.264). 그러나 목포에 관한 다음 자료들의 내용을 감안할 때 1899년 6월에 창간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木浦誌》, pp. 232-233; 《木浦府史》, pp.532-533).

상업회의소 공문게재료 3원 등 18원을 합쳐도 월 총수입이 80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었다(《木浦誌》, p.238-239). 한편 창간 다음 해에 목포신보 기사를 그만두었던 지바 다네사시(千葉胤矩)에 의해 1900년에는 양자신문(兩字新聞)이라는 등사판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지만 곧 폐간되고 말았다(《木浦府史》, p.535).

이외에도 1899년에 개항된 군산에서는 1903년에 군산신보(群山新報)가 주간으로 발행되다가 없어지고, 같은 해에 다시 한남신보(韓南新報)가 발행되었다.¹⁹⁾ 또한 일본인 거류민 수가 불과 100여명밖에 되지 않던 대구에서 일본인회(日本人會)에 의해 1901년에 등사판으로 달성주보(達成週報)가 발행되었는데,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4호로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櫻井義之, 1941, p.10; 《大邱府史》, p.214).

이렇듯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전부터 신문이 발행되던 부산이나 인천은 물론 원산, 목포, 군산, 대구 등에서도 신문이 발행되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발행된 신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간신문이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더욱이 일부는 등사판 신문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인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지역에서조차 거류민 단체나 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신문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통해, 일본인들이 신문을 통해 자신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이익을 확대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점차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낭인들이 신문을 발행한 경우도 있었고, 일본의무성이 일부 지방에서 영사관을 통해 신문발행을 지원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인천의 신조선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한편 거류민의 수적 증가로 신문의 이윤추구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 일본의 침략정책과 지방신문

일본은 초기부터 자신들의 침략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한국 내 일본인 발행신문에

19) 《群山府史》 p.253.에는 1903년에 창간된 것이 한남일보(韓南日報)라고 되어 있지만, 통감부통계연보에는 계속해서 1903년 4월에 창간된 것이 한남신보라고 되어 있다(《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76; 《第2次統監府統計年報》, p.122; 《第3次統監府統計年報》, p.166). 《群山府史》의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부실한 반면에 1900년대 후반에 나온 통감부 자료가 매우 상세하다는 점에서 1903년에 창간된 것을 한남신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해서도 규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이미 청일전쟁 중이던 1894년에 8월에 일본의무 대신에게 한국에서 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도 '칙령 134호'가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는 보고가 있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4, p.280). 칙령 134호는 외교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을 신문에 게재할 때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초고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었다(《한국언론연표》I, p.6). 이에 대해 일본의무성은 한국 내의 일본인 신문도 영사관의 검열을 통해 '유해한 항목의 보도'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4, p.280, p.282). 당시에 발행되던 신문이 인천의 조선신보뿐이었고 이 신문의 1894년 7월 23일자 호의가 발매금지되었던 사실을 보면, 이러한 규제는 바로 조선신보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서, 앞으로 한국 내의 일본인 신문들이 군사나 외교 등 일본의 한국 침략과 주로 연관될 수 있는 분야의 보도를 할 경우 영사관이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청일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신조선보와 같이 일본인들에 의해 발행된 극히 일부 지방신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신문들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3국 간섭에 직면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정책이 주춤하고 있던 상황에서, 과격한 논조로 사실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등의 보도를 하여 일본인 거류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국 신문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에 불과했던 것이다(《仁川府史》, pp.1382-1384). 극히 일부의 신문이나마 이러한 논조를 보인 것은, 일본의 한국 침략이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일본인 거류민들의 기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주한일본공사관측은 이러한 신문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895년 5월에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하였는데, 일본의무성은 당시 일본 국내에서 언론을 규제하는데 사용되던 신문조례(新聞條例)를 한국의 일본인 경영신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답신을 보내주었다(채백, 1990, pp.208-209; 《仁川府史》, pp.1382-1384).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던 한성신보(漢城新報)가 일본의무성의 사실상의 기관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신문조례의 적용은 주로 인천 등 지방에서 일본인 민간인들이 발행하던 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문조례를 이용한 언론통제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 당시 인천 영사는 통제만 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주어 오히려 이런 신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일본외무성에 올렸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 조선신보는 1897년 4월부터 매달 50원씩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한일외교사료총서》2, pp.3-9). 이렇듯 보조금을 받으면서 조선신보가 “왕래(往來)의 폐습(弊習)을 일변(一變)” 하였다고 하며 인천 영사가 보조금의 계속적 지급을 요구했던 것을 보면,²⁰⁾ 보조금 지급이 신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필요에 따라 이들을 일본의 침략정책에 동원하는데 유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¹⁾ 이것은 결국 조선신보가 서울의 한성신보와 함께 민족지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정진석, 1983a, pp. 20-21).

그러나 이러한 조선신보의 경우는 인천이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다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반드시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즉 다른 지방신문들도 대부분 영사관을 통해 일본외무성의 보조금을 받기는 했지만,²²⁾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아직까지는 각 지방의 거류민들이 정착하고 상권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렇듯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일본인 발행의 지방신문들이 일본의 침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논조를 피하며 각 지방에 일본세력을 부식시키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4. 노일전쟁 이후의 지방신문

1) 노일전쟁 발발과 지방신문의 창간

노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2월 이후 일본인들의 신문발행이 비교적 활발해져, 일부 지방에서도 새로운 신문들이 나오게 되었다. 기존에 신문이 발행되던 지역에서는

20) 조선신보에 대한 보조비 지급은 처음에는 1년 정도만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연장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인천 영사가 일본외무성에 올린 “朝鮮新報保護金繼續稟請件”에 잘 나타나 있다(《한일외교사료총서》2, pp.29-30).

21) 인천 영사가 1903년 3월에 일본외무성에 올린 보고서에는 서울의 한성신보가 일문과 국문 일간지를 각각 발행하게 된 것을 거론하며, 인천의 조선신보도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을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려주면 국문신문을 발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한일외교사료총서》2, pp.223-225).

22) 원산의 영사 직무대리가 일본외무성에 보낸 “新聞紙補助金下附方 二關ノ稟請件”에 서 부산, 목포, 경성, 인천 등 다른 지역의 예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 일본인 민간인들이 지방에서 발행하던 대부분의 신문들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한일외교사료총서》3, pp.2-3).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거나 추가로 새로운 신문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기존에 신문이 나오지 않던 극히 일부 지역에서도 새로이 신문이 발행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신문이 발행되었던 부산에서는 1904년에 조선시보가 합자회사로 체제를 갖추고 인쇄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등의 발전을 하였다. 또한 1905년 1월에는 새로이 조선일보(朝鮮日報)가 창간되었는데, 이는 동년 11월에 조선시사신보(朝鮮時事新報)로 개제되었다(《釜山要覽》, pp.336-337). 이러한 조선일보나, 이를 개제한 조선시사신보도 조선시보와 마찬가지로 낭인계 인물들에 의해 발행되었다(김대상, 1981, p.22). 한 편 1904년 12월에는 저속한 기사를 주로 게재하여 '하층민의 환영'을 받았던 조선매일신문(朝鮮每日新聞)이 창간되어 한 동안 발행되다가 곧 폐간되고 말았다(櫻井義之, 1941, p.14). 이렇듯 지방으로서는 가장 먼저 부산에서 한 때 3개의 신문까지 발행되었던 것은, 최초의 개항장으로서 일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상권도 상당히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²³⁾ 특히 낭인들에 의해 발행되어 정치적 목적의식이 강했던 신문과 저속한 기사를 게재하는 상업적 성격의 신문이 동시에 발행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 지방신문의 두 가지 유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인천에서 발행되던 조선시보가 주도하여 1904년 3월 10일에 국문판인 대한일보(大韓日報)가 창간되었는데, 이 신문은 동년 12월에는 서울로 본사를 옮겨 계속 발행되며 민족지들과 치열한 논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정진석, 1983b, p.51). 그리고 인천에서는 1904년 가을에 인천상보(仁川商報)라는 상업신문이 창간되어 발행되다가 곧 조선일일신문(朝鮮日日新聞)으로 개제되어 발행되게 되었다.²⁴⁾ 이 신문은 1905년 초에 영국의 식민지 경영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여, 일본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櫻井義之, 1941, p.13). 이렇듯 노일 전쟁의 승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 지방신문에서 식민지 경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

23)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조선시보가 창간되었던 1894년의 부산 내 일본인 수가 4,024명이었는데 비해, 노일전쟁이 벌어진 1904년에는 11,996명, 1905년에는 13,36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일본인 수는 계속 늘어나 1910년에는 21,928명이나 되었다(부산상공회의소, 1982, p.49).

24) 인천상보가 1903년에 창간되어 1906년에 조선일일신문으로 개제되었다는 자료들도 있다(《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77; 原八郎, 1936, p.264; 이해창, 1983, p.357). 그러나 본고에서는 1905년 5월의 기록을 근거로 한 다음의 자료를 따랐다(櫻井義之, 1941, p.12).

루었다는 것은,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신문들조차도 한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면에 대구에서는 1901년에 달성주보가 잠시 발행된 이후 신문이 없다가, 1905년에 조선(朝鮮)이라는 주간 신문과 대구실업신보(大邱實業新報)라는 격일간 신문이 창간되어 발행되었다.²⁵⁾ 특히 대구실업신보는 구마모토현 출신의 낭인계 인물인 '한인유력자의 찬조'를 받아 발행한 것으로, 관찰사 이용익의 배척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大邱府史》, p.214). 이것은 이미 노일전쟁 와중에서 이미 지방에도 본격적으로 친일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의 협조 하에 일본인 발행 지방신문이 침략적 성격을 드러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일전쟁 기간 동안 부산, 인천, 대구와는 달리 원산, 목포, 군산에서는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산에서는 1903년에 창간된 원산시사만이 계속해서 발행되었고, 목포에서도 1899년에 창간된 목포신보만이 계속 발행되었으며, 군산에서도 1903년에 창간된 한남신보만이 계속 발행되었을 뿐이다.

한편 노일전쟁 발발 이전에는 신문이 발행되지 않던 평양에서도 이 시기에 새로이 신문이 발행되게 되었다. 평양의 경우 구마모토현 출신으로 당시에 일본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신토오 요시오(眞藤義雄)가 신문발행을 추진하였다(《平壤全誌》, p.953). 청일전쟁 당시인 1894년 11월에 부산에서 조선시보를 발행했고, 1895년 2월에는 서울에서 한성신보도 발행한 바 있으며, 1904년 당시에는 일본 중의원의원(衆議院議員)이었던 아다치 겐조는 동향인 신토오의 신문발행을 적극 지원하며 신문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본의무성에 요청하는 의견서를 올리기도 했다.²⁶⁾ 이미 등사판 신문을 발행한 적도 있던 신토오가 일본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결국 1905년 7월에 평양신보(平壤新報)를 창간하게 되었다.²⁷⁾

25)당시에 활동한 바 있던 일본인 언론인의 회고에는 조선이 1905년 6월에 순간으로 창간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河井朝雄, 1931, p.72), 일본에 보존되어 있는 이 신문을 열람한 바 있는 필자들은 모두 동년 1월에 주간으로 창간되었다가 6월에 휴간했고, 9월에 부산으로 이전한 후 곧 폐간되었다고 한다(櫻井義之, 1941, p.10; 이해창, 1983, pp.358-359). 또한 대구실업신보의 창간 시기도 1905년 2월(이해창, 1983, pp.358:《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77), 1905년 3월(《대구부사》, p.214), 등으로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자료들 종합해 볼 때 적어도 1905년 초에 대구에서 2개의 신문이 창간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노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부 지방에서 신문들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문발행이 활발해 졌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목적 의식을 가진 신문들과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한 신문들이 모두 발행되었지만, 특히 노일전쟁의 승리를 목전에 둔 가운데 일본의 침략을 위해 나름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신문들이 나타났다는 점이 과거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을사조약 이후의 지방신문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결국 1905년 11월에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러한 을사조약으로 인해 한국은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1905년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지방에서의 신문발행도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전부터 신문이 발행되던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신문들이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신문이 발행되지 않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새로이 신문이 발행되게 되었다.

<표2> 러일 전쟁 이후 신문(잡지) 수의 변화

연 도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신문(잡지)	11	14	27	34(4)	32(3)	34(4)	28(4)
한국내 일본인	31,093	42,460	83,315	98,001	126,168	146,147	171,543

자료 : <統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판.
 <朝鮮の人口現象>, pp.105-106.

먼저 부산에서는 조선시보와 1907년 10월에 조선시사신보를 개제한 부산일보(釜山日報)에다가, 1907년 5월에 창간된 부산일일신문(釜山日日新聞)까지 다시 한동안 3개의 일간신문이 발행되었지만, 부산일일신문이 곧 폐간되어 다시 기존의 2개 신문

26) "平壤新報社設立意見書,"(1894年 12月 26日)(《한말외교사료총서》2, pp.400-405; 安達謙藏, 1960, p.110.)

27) "平壤新報創刊報告の件,"(1905年 7月 15日)(《한일외교사료총서》, pp.414-415). 이외의 자료들 중에도 평양신보의 창간일을 1905년 7월로 기록한 경우도 있고(《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77). 이와는 달리 1906년으로 기록한 자료도 있다(《平壤全誌》, p.953).

만이 발행되게 되었다(《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122; 《第2次統監府統計年報》, p.166). 목포에서도 1910년 4월에 창간된 전남신문(全南新聞)이 격일간으로 잠시 발행되다 폐간되고,²⁸⁾ 기존의 목포신문만이 1907년 7월부터 격일간으로, 다시 1909년 12월부터는 일간으로 바뀌어 계속 발행되었다(《木浦府史》, p.536). 또한 대구에서도 1906년 12월에 대구일보(大邱日報)가 창간되었다가 곧 폐간되고, 그후에는 1905년에 창간된 기존의 대구실업신보가 대구신보(大邱新報)를 거쳐 1906년 12월에는 대구일일신문(大邱日日新聞)으로 개제되었다가, 1908년부터는 다시 대구신문(大邱新聞)으로 개제되어 계속 발행되었다(河井朝雄, 1931, p.74; 《大邱府史》, p.215; 김진화, 1978, p.64). 한편 인천의 경우 인천상보를 개제하여 발행되던 조선일일신문이 휴간 끝에 1908년에 서울로 이전했고, 조선신보는 1907년 5월에 창간되었던 조선타임즈(朝鮮타임즈)와 합병하여 1908년 11월에 조선신문(朝鮮新聞)으로 개제하여 계속해서 발행되게 되었다(《川府史》, p.1394; 《한국언론연표》, p.144). 마찬가지로 군산에서도 1903년에 창간된 한남신보와 1905년 12월에 창간된 군산신보가 격일간으로 계속 발행되다가 1908년 3월에 모두 폐간되고, 이 둘을 합병하여 4월부터 군산일보(群山日報)가 일간으로 발행되게 되었다(《群山府史》, p.253; 《第3次統監府統計年報》, p.166; 《新聞總攬》1911年版, p.391).

기존 신문들만 계속 발행되었거나 기존 신문들이 합병되어 새 신문이 창간된 지역들과는 달리 원산에서는 1903년에 창간되었던 원산시사가 1906년에 폐간되고 말았다. 그후 1906년 9월에 북한실업신보(北韓實業新報)가 창간되었고, 1907년 2월에는 원산시사신보(元山時事新報)가 창간되었는데, 다시 1907년 12월에는 이 두 일간신문이 합병해서 다음해인 1908년 1월부터 원산일보(元山日報)가 발행되게 되었다. 그 뒤 1909년 11월에 원산일보가 폐간되었지만, 1909년 1월에 새로 창간된 원산매일신문(元山每日新聞)이 남아서 계속 활동하게 되었다(高尾新友衛門, 1922, p.186). 또한 평양에서도 1905년에 창간된 평양신보가 계속 발행되다가, 1906년 11월에 평양실업신보(平壤實業新報)가 새로 창간되어²⁹⁾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1908년말에 결국 기존 신문인 평양신보가 폐간되고 말았다. 그후 1909년 9월에는 다시 평양신문(平壤新聞)

28) 다른 자료에는 1909년 4월에 목포에서 전남신보가 일간으로 창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1年版, p.240). 또한 1909년 2월 현재 남한일일신문(南韓日日新聞)이 발행된 적도 있다고 한다(《언론연표》I, p.149).

이 새로 등장하여 평양실업신보를 개제한 평양일보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平壤全誌》, pp.954-958; 《한국언론연표》, p.167).

또한 을사조약 직후에는 전에 신문이 한 번도 발행된 적이 없던 상당수의 지역에서도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마산에서는 1905년에 월6회 발행의 마산시보(馬山時報)가 창간되어, 1906년 초에는 격일간으로 발전했지만 곧 없어지고, 결국 1908년 10월에 마산신보(馬山新報)가 창간되게 되었다.³⁰⁾ 전주에서는 1905년 12월말에 일문과 국문을 모두 사용한 전주신보(全州新報)라는 등사판 주간신문이 등장했다가, 통감부의 보조금 500원을 받아 인쇄시설을 갖추고 1907년 5월부터는 다시 격일간으로 발행되다가, 1910년부터는 일간으로 발행되게 되었다(《全州府史》, p.889). 진남포에서는 1906년 1월에 신문진남포가 창간되었다가 12월에 남포신문(南浦新聞)으로 개제되어 발행되었고,³²⁾ 같은해 9월부터는 진남일보(鎭南日報)가 창간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결국 1907년 6월에 진남포신보(鎭南浦新報)로 합병되어 계속 발행되게 되었다(《鎭南浦府史》, pp.389-390; 《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77; 《第2次統監府統計年報》, p.123).

29) 평양실업신보의 창간 시기는 1906년 11월로 기록된 자료도 있고(《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770), 1907년으로 기록된 자료도 있다(《平壤全誌》, p.954). 그러나 1906년말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을 정리한 통감부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때, 1906년 11월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0) 1905년에 마산에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고(김형운, 1973, p.248), 1906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도 있다(《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76). 이것은 결국 《馬山港誌》에서 마산시보가 1905년에 시작되어 1906년 2월부터 체제를 갖추었다고 기록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100). 또한 마산시보가 1907년에 창간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김대상, 1981, p.25), 마산시보가 1907년 현재 발행되는 신문을 정리한 자료에는 없고, 1908년 현재 발행되는 신문을 정리한 자료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1908년에 창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第2次統監府統計年報》, pp.122-123; 《第3次統監府統計年報》, p.166).

31) 《全州府史》와 마찬가지로 1905년 12월에 창간되었다는 기록도 있고(原八郎, 1936, p.266), 이와는 달리 1906년 1월에 창간되었다는 기록도 있다(《第1次統監府統計年報》, p.77). 그러나 앞의 자료에는 등사판 주간지라는 점은 같지만 제호가 전주상보(全州商報)로 되어 있다.

32) 진남포신보의 후신인 서선일보(西鮮日報)의 창간일이 1906년 12월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는데(《신문총람》1915年版, p.673), 이는 아마도 남포신문을 그 출발점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표3〉 1910년말 지방신문의 현황

발행지	신문명	발행부수	발행지	신문명	발행부수
경기 인천	朝鮮新聞	8,529	평남 평양	平壤日報	852
충남 대전	三南新報	360	평양	平壤新聞	833
경남 부산	朝鮮時報	2,412	진남포	鎭南浦新報	750
부산	釜山日報	2,400	평북 신의주	鴨江日報	485
마산	馬山新報	841	함남 원산	元山每日新聞	1,556
경북 대구	大邱新聞	1,150	함흥	民友新聞	946
전남 광주	光州新報	514	함북 청진	北韓新聞	1,567
목포	木浦新報	732			
전북 전주	全州新報	480			
군산	群山日報	649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年版, pp.654-657

* 민우신문만 격일간, 나머지는 모두 일간.

이외에도 ³³⁾ 신의주에서는 1906년 12월에 만한신보(滿韓新報)가 창간되고 1907년 7월에는 평안일보(平安日報)가 창간되었다. 1908년에 평안일보는 폐간되고 만한신보는 신의주시보(新義州時報)로 개제되어 발행되다가 1910년에는 다시 압강일보(鴨江日報)로 개제되어 발행되게 되었다. 또한 청진에서는 1907년 8월에 북관신일본(北關新日本)이라는 신문이 등장했다가 없어지고, 1908년 8월에 북한신보(北韓新報)가 창간되어 발행되었고, ³⁴⁾ 함흥에서는 1908년에 함흥신보(咸興新報)와 민우신문(民友新聞)이 등장했다가 함흥신보는 없어지고 격일간 민우신문만이 계속 발행되었다. (原八郎, 1936, p.267). 또 광주에서는 1909년 4월부터 광주신보(光州新報)가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³⁵⁾ 대전에서는 1909년 9월부터 삼남신보(三南新報)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³⁶⁾ 비록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일부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발행부수가 1,000부를

33) 부사가 없는 이하의 지역들에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주로 이용했다(《第3次統監府 統計年報》, pp.166-167; 《第4次朝鮮總督府統監府統計年報》, pp.240-241;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年版, pp.654-655). 다만 다른 자료들에 나타난 내용의 경우에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를 달았다.

34) 일제 강점과 함께 북한신보는 북한신문으로 개제되었다. 한편 북한일보로 개제되었던 기록도 있다(《新聞總攬》1926年版, p.502). 이들 신문의 후신인 북선일보(北鮮日報)가 창간일을 1908년 8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新聞總攬》1932年版, p.475), 북한신보를 출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을사조약 이후의 지방신문에는 수적 증가 이외에도 과거와는 다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상당수의 신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런 변화 속에서 점차로 인쇄사업 등을 통해 부대수입을 올리려 하거나(《釜山要覽》, pp.336-337; 《木浦誌》, p.240), 신문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平壤全誌》, pp.953-958; 《鎭南浦府史》, pp.389-390). 이에 따라 일부 지방신문들은 점차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河井朝雄, 1931, p.299).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영리추구의 과정에서 일부 신문들은 통감부의 지배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장애가 되는 논조를 보이기도 하여 강력한 통제를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3) 국문판 발행과 한국인의 지방신문 발행

1904년에 노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서울에서 일본인들의 국문신문³⁷⁾ 발행이 갑자기 활발해졌다(최준, 1976b, pp.300-303; 정진석, 1983b, 50-63). 이전까지 주로 일문신문만을 발행했던 것과는 달리 전쟁 발발과 함께 국문신문을 갑작스럽게 발행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의 보호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즉 민족지들과 맞서서 논전을 벌이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일본인에 의한 국문신문 발행이 활발해졌던 것이다.

35) 1908년 10월부터 이미 주간 국판신문(菊判新聞)이 발행되다가 광주신보로 발전했다는 기록도 있다(《新聞總攬》1920年版, p.891). 또한 광주에는 1909년에 한 동안 전남신문이 발행된 적도 있었다(《한국언론연표》I, p.160).

36) 1909년 7월에 삼남신보가 창간되었다는 자료도 있고(《新聞總攬》1920年版, p.888), 1909년 2월에 대전신문(大田新聞)이 창간되었다가, 다음해 3월에 삼남신보로 개제되었다는 자료도 있다(《新聞總攬》1926年版, p.506). 그러나 1909년말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을 정리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삼남신보가 적어도 1909년에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第4次朝鮮總督府統監府統計年報》, p.240).

37) 이후의 부분에서 국문신문 또는 국문판이라고 할 때는, 한글은 물론 국한문혼용을 포함하여 한국인이 해독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한 신문을 모두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예컨대 만세보(萬歲報)에는 대구신보가 국한문판을 발행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한국언론연표》I, p.86), 다음의 자료에는 언문(諺文)판을 내고 있다고 되어 있다(《大邱府史》, p.215). 그러나 실제로 신문의 실물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국문판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당시에 서울과는 달리 지방에서 일본인들에 의한 국문신문 발행은 전혀 없었고, 다만 일부 지역에서 일문관의 부록으로 국문관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미 전주에서는 1905년에 등사판 주간신문인 전주신보를 일문과 국문을 함께 사용하여 발행한 적도 있고, 1910년초에 일간지로 전환되었을 때도 국문면도 발행했다고 한다(《全州府史》, p.889). 또한 1906년에는 대구에서 발행되던 대구신보가 국문관을 발행한 적이 있었다.³⁸⁾ 최준, 1976b, p.302).

이런 신문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국문관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평양신문이었다. 평양신문은 1909년 9월에 창간하면서 별도의 국문신문을 발행하려고 한다가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판단을 하고 1909년에 평양신문의 부록 형식으로 국문관을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선우순(鮮于筭)이 주필로 활동했고, 김환(金丸)이 기자로 활동하였다(《平壤全誌》, p.957). 선우순은 1912년에 매일신보(每日申報) 평양통신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뒤에 친일단체인 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며(김규환, 1978, p.184), 김환은 1909년부터 친일지 국민신보(國民新報)의 기자로 출발하여 이후 매일신보 등의 친일지에서만 활동했던 인물이다(정진석, 1995, p.152, p.171). 한편 광주신보도 1910년 1월 8일에 종래의 주간제를 일간제로 바꾸면서 아예 국문과 일문을 격일로 발행하기도 했다(《한국언론연표》, p.181).

이렇듯 지방에서 발행되던 일문지들이 국문관을 발행하기 시작했던 것은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 전략의 산물이었다. 물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대체로 영리 위주의 운영을 하게 된 일문지들이 제한된 일본인 독자들만으로는 판매수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인 독자들에게도 눈을 돌려 국문관을 발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문관 발행과는 별도로 한국인에 의한 지방신문의 발행이 추진되기도 했다. 1906년 6월에 대구에 있는 출판사인 광문사(廣文社)가 농상공부(農商工部)로부터 신문발행 허가를 얻었지만, 실제로 신문을 발행하지는 못했다(최기영, 1991, p.153). 아마도 일본인 발행 신문인 대구신보의 국문관 발행이, 이들로 하여금 대구

38) 만세보(萬歲報) 1906년 8월 5일자 기사에는 대구신보가 국한문관을 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한국언론연표》 I, p.86), 다음의 자료에는 1906년 4월 경부터 12월 정도까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大邱府史》, p.215).

에서 국문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³⁹⁾ 또한 1907년 6월경에는 개화(開化)에 상대적으론 관심이 높았던 관서지방(關西地方) 출신의 일본 유학생들이 평양에서 신문을 발행하려고 시도하여, 2000환을 모집하였으나 결국 신문 발행에 성공하지는 못했다(최기영, 1991, pp.151-152).

또한 1908년 8월부터 경북 관찰사(觀察使) 박중양(朴重陽)이 대구의 일본인 유지와 공동으로 준비하여 국문과 일문을 모두 사용하는 일간신문 대구신보(大邱新報)를 9월 15일에 창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⁴⁰⁾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계획이 연기되었는지, 황성신문(皇城新聞) 10월 4일자에는 박중양이 지역 유지의 협조 하에 자본금을 모으는 한편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아 신문을 발행하여, 관하 각 군민들에게 강제로 구독케 함으로써 "민지(民智)를 개발하며 관민상하(官民上下)의 의견을 소통"하게 할 것을 계획 중이라는 기사가 다시 실렸다(《한국언론연표》I, p.142).

그러나 박중양과 일본인 유지들이 협의하여 대구신보를 발행하려던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에 대구에는 대구일일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신문이 창간되면 지역 유지들 사이에 알력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일본인 유지들에 의해 제기되고, 이를 박중양이 받아들여 결국 대구신보는 창간되지도 못한 채 대구일일신문과 합동하여 1908년 10월부터 새로이 대구신문을 창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河井朝雄, 1931, pp.302-305; 《大邱府史》, p.215). 1909년에는 다시 대구에서 박중양에 의해 신문발행이 추진된 듯한데, 이마저도 몇 호의 견본신문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최기영, 1991, p.154).

박중양은 일본인들에 의해 '결물'(傑物)이라는 평을 들을만큼 일본인 거류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친일적 인물이었다(반민족문제연구소, 1993, pp.241-242). 따라서 그가 대구에서 국문과 일문을 모두 사용한 신문을 발행하려고 했던 것은, 서울

39) 광문사 사장 김광재(金光濟)는 1906년 6월에 대한매일신보에 친일신문인 국민신보의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기도 했고, 1907년 2월에는 국채보상운동을 발기하기도 했던 인물이었다(정진석, 1992, pp.204-205). 따라서 그가 신문을 창간하려고 했던 것은, 1906년 4월에 대구신보가 국문판을 발행하던 것에 맞서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0) 《京城新聞》1908년 9월 1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신문발행을 위한 준비는 이미 8월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이 기사에는 창간에정일이 9월 15일로 되어 있다(《한국언론연표》I, p.141).

에서 발행되던 국문신문의 역할처럼 일제의 지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신문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2의 박종양'이라는 비난을 들을만큼 친일적이었던 평남 관찰사 이진호(李軫鎬)가(반민족문제연구소, 1993, p.242) 1910년 6월에 신문발행을 청원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박정규, 1997, p.72)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민족운동의 차원에서나 또는 친일적 활동의 수단으로서 지방에서 한국인들이 신문을 발행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실제로 창간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렇듯 신문 창간 계획이 추진되던 대구와 평양이 모두 이미 일본인 발행 신문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고, 특히 국문판이 발행되었던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지방신문 발행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지방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제로 한국인에 의해 발행된 구한말 유일의 지방지인 경남일보는 신문이 전혀 발행된 적이 없던 진주에서 창간되었다. 1908년 말 또는 1909년 초 정도부터 신문발행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진주 지역의 한국인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찰사 황철(黃鐵)이 지원하여 결국 1909년 10월 15일에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는 경남일보가 창간되게 되었는데, 주필은 황성신문사의 사장을 지냈던 장지연(張志淵)이 초빙되어 맡게 되었다(최기영, 1991, pp. 144- 155). 진주의 한국인 유지들은 신문이 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거나 보수적이라는 세평(世評)을 불식시키고 적극적으로 개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문 발행에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최기영, 1991, pp.152-153). 한편 친일파로 비난받던 황철이 신문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배경에는, 아마도 박종양이나 이진호가 의도했던 바와 마찬가지로의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필을 맡게 된 장지연이나 한국인 유지의 노력으로 경남일보가 황철의 의도했던 바와 같은 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식민지나 다름없는 현실에서 항일적 역할은 거의 못하고 단지 민지개발과 실업장려를 위주로 하는 계몽적 활동과 지방 행정기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 정도만을 했다고 할 수 있다(박정규, 1997, p.73). 특히 경남일보는 1910년 5월 10일자에서 "본보의 지위 성질이 본도내(本道內) 관리와 인민에게만 관계"된다고 하며 지방신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한상란, 1978, p.31).

창간 이후 경남일보는 대략 2,000부 정도를 발행했지만 구독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고 광고수입도 얼마 되지 않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최기영, 1991, pp.167-176).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일보는 1914년말까지 5년 동안 계속 발행되었다. 특히 경남일보는 정치적인 문제를 피하고 민지개발과 실업장려라는 목적에만 치중했기 때문인지, 일제에 의한 강점 이후에도 계속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구한말에 이미 일부 지방에서 신문을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된 곳은 진주뿐이었다. 이것은 일본인이 불과 수 백 명 거주하는 지방에서조차 신문을 발행했던 것과는 극히 대조가 되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 일본 국내의 신문발행이 매우 활발하여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일부 신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까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본인 발행 지방신문이 1910년 현재 17개였던데 비해 한국인 발행 지방신문이 경남일보 단 하나 뿐이었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였다고 할 수 있다.

제국신문이 1906년 6월 2일자에 전국 13도에 “등사판으로도 조각신문 한 장을 발간치 못하”는 현실을 개탄했을 정도로, 지방사회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지방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인에 의한 지방신문의 발행은 처음부터 매우 부진했던 것이다(최기영, 1991, p.141). 그나마 이렇듯 어려운 가운데 지방신문의 발행을 추진하려던 시도들은, 한국인에 의해 발행되던 중앙신문의 전국적인 보급으로 그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면서 모두 포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의 지배정책과 지방신문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906년 2월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사실상 식민지나 다름없었던 통감부 하의 한국에서 일본인들의 신문발행이 활발했던 것은 통감부가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부 신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일본인 거류민의 급격한 수적 증가에 따라 신문을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통감부가 설치된 직후 한 동안은 전자의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 후기로 갈수록 후자의 경우가 더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언론통신계의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신문이 많

이 발행되면서 (釋尾春飭, 1926, pp.348-349), 대부분의 지방에서 1-2개 정도의 신문이 발행되게 되었던 것이다.

통감부는 을사조약 이전부터 일본의무성이 영사관을 통해 일부신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던 업무를 이어 받았는데, 이는 1907년 5월에 인천영사가 통감부 총무장관에게 올린 조선신보의 보조금 청구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⁴¹⁾ 이 보고서에는 특정 신문에 대해 보조금을 주면 다른 '민간신문'들이 통감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고, 폐지하면 통감부의 정책수행을 위해 신문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인천 지역의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仁川府史》, pp.1387-1388). 이러한 보조금 지급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통감부가 설치되고도 한동안 여러 신문에 대해 계속 지급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점은 전주신보가 1906년에 통감부의 보조금 500원을 받아 인쇄시설을 갖추는데 사용했다고 한데서도 확인될 수 있다(《全州府史》, p.889).

한편 한국에서 신문을 발행하려고 했던 일본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미리 고려하고 신문경영에 나섰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한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신문을 발행하던 일본인들이 겉으로는 일본의 지배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는 '낭인형'을 가장해도, 실제로는 상당수가 일본의 지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신문을 통해 영리를 추구했던 '일확천금형(一攫千金型)'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집착도 강했을 것이다(최준, 1978: 308-309). 특히 신문발행만으로는 수익성이 없던 지방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을 식민지 체제로 만들었던 강점 직전의 시기에 가면 통감부로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지방신문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고, 일본인 거류민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신문들로서도 보조금 지급 없이 판매수입이나 광고수입만으로 운영하려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지

41) 조선신보는 1897년 4월부터 월 5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1907년 5월의 자료에는 보조금 액수가 100원으로 되어 있다(《仁川府史》, pp.1387-1388). 다른 자료에 1906년 1월까지 월 50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한일외교사료총서》 2, p.322), 보조금이 인상된 것은 최소한 1906년 2월, 즉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부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신문들로 하여금 인쇄사업, 국문판 발행 등 수익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고, 특히 판매수입 확대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통감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거나 기밀사항을 보도하여 통감부의 정책수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감부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지방신문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1906년 12월에 대구일보가 '반신불구의 일한협약(日韓協約)'이라는 기사를 통해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비판하자 바로 발행정지를 내린 적도 있었다(河井朝雄, 1931, p.73). 특히 통감이 소네 아라스케(曾 荒助)로 바뀐 이후, 즉 강점 직전의 시기에 가면 통제가 크게 강화되어 1908년 4월에는 대구일일신문의 주간예 대해 대구이사청(理事廳)의 거류민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한령(退韓令)을 내리기도 했고(김규환, 1978, p.115), 조선타임즈(朝鮮タイムズ)의 기사를 문제 삼아 발행정지를 내리기도 했다(정진석, 1983b, p. 102). 나아가 일본인 발행신문을 규제하기 위한 신문지규칙(新聞紙規則)이 1908년 5월에 공포되면서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표 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특히 1910년 6월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통감으로 오면서 지방신문에 대한 발행정지나 발매금지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4〉 통감부의 일본인 발행 지방신문에 대한 통제

신문명	발행지	일시	규제사항	적용법규	비고
大邱日報	대구	1906.12.	발행정지		폐간·통감에 대한 비판기사.
大邱日日新聞	대구	1907.2.	퇴한령 (退韓令)		
大邱日日新聞	대구	1908.4.10.	퇴한령 (退韓令)	법률제80호, 清國及朝鮮國在留帝國臣民取締法 1조,	2년간 한국 在留 금지
朝鮮タイムス	인천	1908.4.17.	발행정지	통감부령 10호 보안규칙 9조2항	五八銀行 비판기사 4. 23. 해정
朝鮮タイムス	인천	1908.5.23.	발매금지	신문지규칙 11조	
釜山日報	부산	1908.5.26.	발매금지	통감부령 12호, 신문지규격 12조	
朝鮮タイムス	인천	1908.10.3.	발매금지	통감부령 12호, 신문지규격 11조	군대수송 관련기사
朝鮮新報	인천	1908.10.3.	발매금지	통감부령 12호, 신문지규격 11조	군대수송관련기사
木浦新報	목포	1910.3.3.	발매금지	통감부령 12호, 신문지규격 10조,12조	치안방해
平壤日報	평양	1910.4.	발매금지	조	
平壤日報	평양	1910.6.12.	발매금지		'합방' 관련 기사
釜山日報	부산	1910.8.5.	발행정지		시국문제 관련기사
朝鮮新報	부산	1910.8.5.	발행정지		
朝鮮新聞	인천	1910.8.10.	발매금지	통감부령 12호, 신문지규격 10조,12조	치안방해 8.12.해정
平壤日報	평양	1910.8.11.	발매금지 발행정지	통감부령 12호, 신문지규격 10조,12조	치안방해 8.14.해정
平壤新聞	평양	1910.8.26.	발행정지 발매금지	통감부령 12호, 신문지규격 10조,12조	치안방해 8.27.해정

자료 : 《大邱府史》, p215; 《한국언론연표》I; 정진석(1983b, pp.73103).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통감부에 의해 발행정지나 발매금지를 당한지방신문들은

주로 부산, 인천, 평양, 대구 같이 비교적 대도시로서 일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나 두 개 이상의 신문이 발행되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었다. 즉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통감부의 통제가 강화된 탓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신문들의 상업주의적인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데라우치 통감은 강점을 앞두고서는 이러한 지방신문들에 대해 한 지역에 하나의 신문만을 남겨 놓으려는 정책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釋尾春飭, 1926, 817).

5. 요약 및 결론

1881년에 부산에서 최초의 신문인 조선신보가 발행된 이래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시기에는 주로 상인들이 일본 거류민들의 단체에서 자신들의 상업적 활동을 통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의 몇 안 되는 신문들이 주로 상업적 정보 위주로 발행되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본정부도 지방신문에 대한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신문을 통한 영리추구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웠고, 거의 모두가 일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인 거류 인구가 얼마 되지 않던 이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신문발행이 활발했던 것은, 당시 일본 국내의 활발했던 신문발행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거류민의 수도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대륙침략론자들인 낭인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듯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정치적인 목적 또는 이윤추구를 위해 발행되는 두 가지 유형의 지방신문이 활동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런 지방신문들 중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통제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방신문의 수도 늘고, 부분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신문도 생겼지만, 아직까지 한국인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노일전쟁 이후 사실상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거류민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인 발행 지방신문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그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노일전쟁 기간과 통감부 설치 직후까지만 해도 발행 주체의 성격이나 실

제 활동을 볼 때 침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지만, 통감부 시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신문의 발행이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통감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문발행을 지원하는 등의 초기의 정책과는 달리 후기로 갈수록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신문들의 보도를 문제삼아 빈번하게 탄압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신문을 동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한국이 이미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통감부의 억압적 성격이 강화되던 가운데 상당수의 지방신문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때로는 통감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기밀사항을 보도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신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나 전국적으로 지방신문이 활발하게 발행되게 되고 이런 신문 중 일부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국문판을 발행하여 한국인들까지 독자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지방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점은 일본인에 의한 지방신문의 발행, 특히 국문판 발행이 활발했던 지역에서 한국인에 의한 지방신문 발행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사회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지방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인에 의한 지방신문의 발행이 실제로 이루어 지지지는 않았다. 또한 이렇듯 어려운 가운데 지방신문의 발행을 추진하던 시도들이 중간에 포기된 데는, 한국인에 의해 발행되던 중앙신문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지방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던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구한말의 지방신문이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되었지만, 통감부 시절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지방신문들의 활발한 활동은 지방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신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이것이 이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일제하에서도 한국인에 의한 지방신문의 발행은 극히 제한되었지만, 강점 직후 상당수의 일본인 발행 지방신문들이 국문판을 발행하여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1920년에 한국인에 의해 창간된 민간지들의 지방보급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일본인들에 의해 주로 발행된 것이었다고는 해도, 구한말 지방신문의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는 연구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연

구는 한국 지방신문의 발전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사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 연구가 전혀 없고,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 등의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구한말(1881-1910)의 전 시기에 전국에서 발행되었던 지방신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때문에도 다소의 한계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한말의 지방신문만을 다루었지만, 일제하는 물론 해방 이후 지방신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또한 특정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신문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는 연구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오늘 날 지방신문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보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신문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려는 노력도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지방신문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국 지방신문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도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연감, 연보, 연표, 자료집

- 계훈모 편(1979), <한국언론연표>, 서울: 관훈클럽.
-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김용구 편, <한일외교극비미간사료총서>.
- 日本電報通信社, <新聞總覽>.
- 統監府, <統監府統計年報>第1次(1907), 第2次(1908), 第3次(1910).
- 朝鮮總督府, <第4次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年版(1912).
- 朝鮮總督府(1927), <朝鮮の人口現象>.

2. 단행본

- 광주언론인동우회(1991), <광주·전남 언론사>.
- 김규환(1978), <일제의 대한 언론·선전정책>, 서울: 이우출판사.
- 김대상(1981), <부산·경남 언론사 연구>, 서울: 대왕문화사.
- 김민환(1988),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서울: 나남.
- 김민환(1996),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김진화(1978), <일제하 대구의 언론 연구>, 대구: 영남일보사.
- 김형운(1973), <마산야화>, 마산: 태화출판사.
- 반민족문제연구소(1993), <친일파 99인>, 서울: 돌베개.
- 부산상공회의소(1982), <부산상의사>.
- 이광석(1997), <경남언론 어제 오늘>, 마산: 도서출판 경남.
- 이문교(1997), <제주언론사>, 서울: 나남.
- 정진석(1995), <인물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菊池謙讓(1931), <朝鮮雜記>第2卷, 京城: 鷄鳴社.
- 高尾新友衛門(1916), <元山發展史>, 大阪: 啓文社.
- 高尾新友衛門(1922), <大陸發展策より見たる元山>, 元山: 東書店.
- 群山府(1935), <群山府史>.
- 原八郎(1936), <海外邦字新聞雜誌史>, 東京: 學而書院.
- 大邱府(1943), <大邱府史>.
- 木浦府(1930), <木浦府史>.
- 木浦誌編纂會(1924), <木浦誌>.
- 釜山府, <釜山府史原稿>1-6 (영인본, 서울: 경인문화사, 1986).
- 釜山商業會議所(1912), <釜山要覽>.
- 信夫淳平(1901), <韓半島>, 東京: 東京堂書店.
- 安達謙藏(1960), <安達謙藏自叙傳>, 東京: 新樹社.
- 安齋霞堂(1932), <忠清南道發展史>, 大田: 湖南日報社.
- 岩永九二一(1931), <半島の新聞>, 京城: 新評論社.
- 仁川府(1933), <仁川府史>.
- 田上征夫(1938), <咸南都市大觀>, 咸興: 咸南都市大觀編纂部.

- 全州府(1943), 〈全州府史〉.
- 鎭南浦府(1926), 〈鎭南浦府史〉.
- 諏方史郎(1926), 〈馬山港誌〉, 馬山: 朝鮮史談會.
- 平壤商業會議所(1927), 〈平壤全誌〉.
- 河井朝雄(1931), 〈大邱物語〉, 大邱: 朝鮮民報社.

3. 논문

- 강창일(1992), “三浦梧樓 公使와 민비시해사건,” 최문형 외, 〈명성황후시해사건〉, 서울: 민음사, pp.29-67.
- 박정규(1997), “한국지방신문의 역사,” 김세철 외, 〈지역사회와 언론〉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pp. 60-94.
- 오주환, “일제의 대한 언론정책,”〈일제의 문화침탈사〉(서울: 민중서관, 1970), pp. 371-492.
- 이해창(1983), “구한국 시대의 일인경영신문,” 〈한국신문사 연구〉, 개정증보판, 서울:성문각, pp. 349-389.
- 임근수(1984), “동양에 있어서의 근대신문의 생성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 〈언론과 역사〉, 서울: 정음사, pp. 33-90. 임
- 임승표(1988), “1876-1896년 개항장 거류 일본인의 경제활동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석(1983a), “민족지와 일인경영신문의 대립,” 〈한국언론사 연구〉, 서울: 일조각, pp. 2-47.
- 정진석(1983b), “노일전쟁 이후 한일합방까지의 한국언론과 언론통제,” 〈한국언론사 연구〉, 서울: 일조각, pp. 48-104.
- 정진석(1992), “한국의 지방언론 발달사,” 〈신부 전달출 회장 화갑기념논총〉대구: 매일신문사, pp. 203-223.
- 채 백(1990), “한국근대신문 생성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상란(1976), “구한말 유일의 일간지 경남일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기영(1991), “진주의 경남일보: 유일의 지방지,”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서울: 일조각.
- 최 준(1976), “군국일본의 대한 언론정책,” 〈한국신문사 논고〉, 서울: 일조각, pp. 214-264.
- 최 준(1976b), “일인계 국문관지의 유형고,” 〈한국신문사 논고〉, 서울: 일조각, pp.288-311.
- 櫻井義之(1940), “半島最初の朝鮮新報のこと,” 〈書物同好會會報〉 9호, pp.29-30.
- 櫻井義之(1941), “韓國時代の邦字新聞,” 〈書物同好會會報〉14호, pp.10-14.
- Aitman, Albert. A., “Korea’s First Newspaper: The Japanese Ch sen Shinp “,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LIII, No.4(Aug. 1984), pp. 685-696.